

서평

『한국현대 생활문화사』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현대 생활문화사 1960년대: 근대화와 근대화』

이순진 외 지음, 창비(2016)

『한국현대 생활문화사』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미니스커트』 김경일 외 지음, 창비(2016)

황정미 _강원대학교

정치의 역동은 늘 과거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만든다. 지난 겨울 광화문 거리를 밝혔던 촛불의 물결은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지난 10여 년 간 보수 정권의 비합리적 정부 운영과 누적된 폐단, 더 나아가 성장 우선 패러다임과 보수 일변도 정치 행태가 결합된 개발시대의 패러다임 전체에 대한 비판과 성찰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 막 인쇄를 마친 박근혜표 국정교과서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자 교실로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곧바로 폐지되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현대사는 현실 정치의 변동과 호흡을 같이하며 해석과 재해석의 논쟁을 낳았고 또한 교과서 기술을 둘러싼 갈등에서도 현대사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그런데 이번 촛불 시위가 불러온 역사적 성찰과 기억의 전환은 그 범위가 이전과는 좀 다른 것처럼 보인다. 즉, 진영 대결식의 이념 논리, 혹은 특정 정권이나 특정 대통령을 지지하

는가에 대한 논쟁에 국한되지 않는 더 큰 담론, ‘국민이 주인’이라는 주권 담론이 대중 정치의 표면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광화문에서 ‘우리가 주권자’라고 외친 시민들의 목소리 이면에는 바로 그 시민과 대중의 관점에서 현대사를 바라보고자 하는 새로운 시선과 욕망이 배태되어 있다.

네 권으로 출판된 『한국현대 생활문화사』(창비, 2016)는 정치나 경제, 사건 중심의 역사가 아닌, 대중과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현대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역작이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10년 단위로 시대상을 다룬 네 권의 단행본을 시리즈로 기획한 것 자체가 눈에 띈다. 한국 전쟁 이후 40년의 현대사를 포괄하는 작업 규모도 획기적이라 할 만하다. ‘생활문화사’를 내걸고 역사학자뿐 아니라 사회학, 영화와 대중문화 전공자 등 다양한 필진들이 집필에 참여하였다. 이처럼 범위가 넓지만 논의의 결이 크게 흐트러지지 않으며 전체 시리즈를 관통하는 일정한 주제의식이 느껴진다. 각권의 서두에는 ‘크게 본 1960년대’라는 식으로 독자들에게 유익한 총론을 제시한다. 다양한 생활과 문화의 영역을 다루는 새로운 시도임에도 각론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의 큰 흐름을 엮어내는 데에는 5인의 기획 위원들의 역할도 컸을 것이다. 다만, 네 권의 책을 서평 한 편에서 모두 다루는 것은 역부족이기에 여기에서는 『1960년대 근대화와 근대화』, 『1970년대 새마을 운동과 미니스커트』를 주로 살펴본다.

왜, 하필이면, 지금 생활문화사인가? 사실 한국 현대사 논쟁은 늘 첨예한 정치적 이념적 입장의 대립으로 점철되어 왔다. 일찍이 『해

방 전후사의 인식』 시리즈는 일제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이후 한국 전쟁, 분단으로 이어지는 한국 현대사를 비판적으로 재조명하는 시각을 제시한 바 있다. 대한민국 수립과 건국, 이승만 정부를 둘러싼 논쟁은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발간으로 재점화되었으며, 곧 다가올 헌법 개정 국면에서 다시금 뜨겁게 부상할 것이다. 최근에는 대중에게 다가가는 현대사 단행본의 출판이 활발하다. 이처럼 현대사를 대중적으로 새롭게 다루는 책들 가운데 『한국현대 생활문화사』는 ‘생활문화’를 핵심 축으로 삼은 점이 단연 돋보인다.

저지들에 따르면 생활문화사를 중심으로 현대사를 성찰하는 목적은 “정치사, 경제사, 외교사, 지성사, 사회사 등과 같은 다른 분야사와 대립각을 세우기 위함이나, 일상사나 신문화사의 중요성을 부각”하려는 데 있지 않다. 물론 기존의 주류 역사 분과나 주류 방법론에 대한 일정한 비판과 성찰이 이 시리즈의 출발점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국제정치 질서, 자본주의 경제질서, 또는 이데올로기 같은 구조적 요인에 의해 인간 행위와 선택이 규정된다고 보는 관점이나 사건사 중심으로만 역사를 설명하는 방식”을 비판한다. 그러나 저자들은 생활문화사를 기존의 정치사, 경제사에 대립시키기보다는, 생활문화를 통해 정치와 경제의 속성을 더 깊이 드러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생활문화 영역을 정치와 분절된 영역이 아니라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띤 영역으로서 주목하고 있다.

저자들이 제시하는 생활문화사를 통해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방식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국가의 ‘공식적 기억’에서 잊힌 역사들을 되짚는 것이다. 두 번째로, 박정희 정권의 유신과 이에 저항하는 반(反)유신의 이분법적 구도로 단순화할 수 없는 다양한 사회의 모습들, 때때로 충돌하거나 맞물리는 다층적 욕망과 이해의 흐름을 포착하며 시대의 본질을 건드리는 미세한 결들을 재조명하는 것이다. 셋째, 다양한 생활문화를 포착하는 관심들은 결국 근대국가와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근대성에 대한 이론적 질문으로 수렴될 것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형성된 근대성의 모습은 어떤 것이며 그것이 남긴 유산의 의미는 무엇인지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다.

먼저 국가 중심의 기억에서 사라지거나 흐릿해진 역사들을 저자들은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재현하고 새롭게 평가하고자 한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 중심의 기억, 국가주의 담론의 체계모니가 강고하게 형성된 시기이기도 한다. 1960년대 편지 맨 앞에 실린 글은 “4·19 전후의 도시빈민”(오제연)이다. 1960년대는 이승만 독재에 저항하는 4·19혁명으로 시작되었으며, 당시 시위를 주도했던 대학생 세력의 일부는 이른바 ‘4·19 세대’로 불리며 정치 엘리트의 한 흐름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오제연의 글은 4·19혁명 과정에서 희생된 사망자 186명 중 대학생은 22명인데 비해 도시 빈민이라고 할 수 있는 하층노동자(61명)와 무직자(33명)는 무려 94명이나 된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사망자나 입건된 사람 중 도시 빈민이 많았던 것은 그들이 혁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빈민은 4·19혁명의 기억 속에서 거의 사라졌다. 그 이유는 ‘양아치’, ‘불량배’, ‘부랑자’ 등으로 인식된 도시 빈민들의 과격한 행동과 시위 방식에 대해 당시 대학생과 지식인, 언론이 비판적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승만 하야 이후 대학생들은 질서 회복에 앞장서는 방식으로 자신과 도시 빈민을 구별했다. 혁명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곧 기억 속에서 사라진 도시 빈민들은 1961년 5·16 쿠데타로 등장한 박정희 정권 하에서 더욱 강화된 사회통제의 대상이 되었고, 이후 도시 개발을 위한 철거와 이주 정책의 대상이 되었다.

잇힌 사람들의 이야기는 “베트남전쟁 참전의 안과 밖”(윤충로)에서도 재조명된다. 1964년부터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한국군 인원은 연병력 32만 4,864명인데, 이들을 뒤따라 총 2만 4,000여 명, 연인원 6만 2800명의 ‘파월 기술자’들이 베트남으로 간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국가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 많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했고 ‘월남 특수’의 가장 큰 비중은 용역 군납이었다. 그 제일선에는 전장의 노동자, ‘파월 기술자’들이 있었다. 외국 기업과 한국 기업에 취업했던 파월 기술자들이 전장의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은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이 벌어들인 수입의 16.3%를 차지할 정도로 큰 액수였다고 한다. 파월 한국 기업들의 권위주의적 노동통제로 기술자들 내부에 누적된 갈등과 불만이 1971년 칼 빌딩 방화사건으로 폭발했다.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파월 기술자들 중 다수는 베트남전 종전 이후 미국, 호주 등 다른 지역으로 재이주하여 어려운 여

건 속에서 해외이주 생활을 개척하였다. 베트남전쟁은 반공 전쟁, 경제발전을 위한 전쟁이었다는 국가의 공식적 기억 이면에서 이른바 ‘월남 패망’ 이후 급속히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진 것 같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은 반공 전쟁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박정희 체제의 욕망, 한국의 분단과 이념 대립, 성장을 위한 질주 등 우리의 현재와 과거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점을 저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군사주의 문화를 사회 전면으로 확산하여 병영 국가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국민총화를 강조하는 유신체제의 등장으로 귀결되었다. 징병제를 강화하고 주민등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교련교육을 통해 학교를 군사주의와 국가주의의 주물공장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학생과 지식인, 언론들은 유신에 저항하였고 특히 도시로 간 ‘여공’들은 저임금의 열악한 작업장에서 민주노조를 조직하였다. 이처럼 유신과 반유신의 구도는 이 시대를 인식하는 기본 틀이기도 하다. 그러나 ‘생활문화사’의 접근은 권위주의와 그에 대한 저항이라는 흑백 이분법으로 시대의 다양한 흐름들을 단순화하는 것을 경계한다. 1970년대는 고도성장이 지속된 시대이며 그 안에서 “여러 주체들의 희망과 욕망, 이해 등이 폭넓게 흩어지며 또한 맞물리고 충돌”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공적원조 사업을 통해 세계적으로 수출하려 했던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와 기억도 단일하지 않다. 한편으로 새마을운동은 빈곤한 농촌을 되살리기 위한 자조운동이라는 긍정적 기억과 농촌 개발을 위해 농민들의 자발성과 헌신성을 위로부터 동원하는

권위주의적 통제의 방편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대립한다. 그런데 황병주의 글(“새마을운동과 농촌 탈출”)에서 새마을운동의 의미는 훨씬 복합적으로 드러난다. 박정희는 당시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기사에서 새마을운동은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라 설명하였고, 특히 서구적 근대화와는 달리 전통을 되살리는 민족주의와 민족중흥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현실의 새마을운동은 농업의 자본주의적 재편, 농촌의 근대적 변환과 함께 자본주의적 인간형을 양산시켰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농촌이 피폐해가는 가운데 농민들의 민족적 협동과 단합을 강조한 것은, 개별 이익의 충돌로 공동체가 산산조각난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민통합’을 외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상으로 제시된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새마을’은 기실 모순과 딜레마의 세계이며, “잘 살고 싶은 개인의 욕망이 무한대로 펼쳐지는 정글이자 예의범절과 준법의식이 투철한 질서정연한 국가, 이것이 새마을 운동의 유토피아”라고 황병주는 분석한다. 신자유주의적 경쟁 하에서 각자도생을 위해 치열하게 자기개발에 몰입하는 오늘날의 한국인들은 여전히 새마을 운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저자의 분석이 무겁게 다가온다.

1970년대에는 고도성장을 배경으로 강남 개발과 부동산 투기 열풍이 몰아쳤다. 1970년부터 1979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0.47%에 달했다. 당시 신문과 잡지에는 경제 성장으로 소비수준이 높아지자 ‘사치, 낭비, 퇴폐풍조’를 경계하는 강경한 논조의 글들이 많았다.

그 주요 타깃으로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은 청소년의 비행, 대학가 청년문화의 방종과 퇴폐 문화, 주부들의 일탈과 풍기문란 등이었다. 실제 1970년대 소비지출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식비의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주거비, 피복비, 잡비 등이 높아지며, 이는 전반적으로 의식주 생활수준이 높아진 것을 보여준다(이상록, “고도성장기 서민의 체감경제”). 아울러 이 시기에는 백화점을 드나드는 “맨손” 거주자들과 저축할 여유도 없는 서민들 간의 양극화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양극화는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표출되기도 하였지만, 그보다는 ‘경제적인 것’을 둘러싼 경쟁의 장에서 더 많은 것을 쟁취하려는 ‘경제적 인간(Homo economocus)’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다고 저자들은 평가한다.

이처럼 유신체제의 폭압성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의 억압과 그에 대한 저항의 틀로만 단순화시킬 수 없는 이 시대의 사회상이 한국사회의 근대성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물론 이 책은 현대사의 다양한 생활문화를 영화관, 학교, 대학과 지식인 사회, 언론, 안방극장과 텔레비전, 공장, 군대, 도시 주변부 등 다양한 공간에서 다루고 있으며, 그러한 다층성을 하나의 이론적 틀로 묶어내는 기획은 애초에 의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의 글에서는 정치적 억압과 고도성장이 엇갈린 박정희 시대에 형성된 대중과 그 주체성, 한편으로 저항을 억압하면서 다른 한편 새로운 경제적 욕망으로 대중을 견인하는 담론들, 곧 이 시대의 통치성이 단편적으로나마 언급되고 있다.

1970년대를 개괄하는 소개글(허은)에서는 유신정권이 집요하게 생

활영역까지 지배하고자 하였고 가정의 살림에서 농촌생활, 학교의
 규율까지 시시콜콜하게 일상생활에 간섭하였다고 지적한다. 이는 역
 설적으로 정권이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생활공간으로 침윤되는 근대성, 근대적 지식권력
 으로 무장한 국가의 ‘지도’와 ‘정신교육’은 “국가의 발전이 나의 발전
 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는 담론의 정치로 체계화되었다. 그 한 예가
 바로 새마을운동의 세 가지 정신(근면, 자조, 협동) 중 ‘자조’가 가장 중
 시된 점이다(황병주, “새마을운동과 농촌 탈출”). 자조는 운동 참여자의 자
 발성과 헌신성을 최대한 동원하려는 것이었고, 국가가 최소한의 지
 원으로 농민과 농촌의 자원 동원을 이끌어내려 하였다. “자조하지 않
 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새마을운동의 모토는 이후 새마을
 운동으로 이어진 ‘정신혁명’론의 주의주의, 정신으로 환원된 추상적
 개인의 절대화와 일맥상통한다. 척박한 여건에서 안보를 투철히 하
 면서도 정신 혁명과 굳은 의지로 위기를 헤쳐 나가는 개인의 모습은
 박정희 시대가 제시한 나름의 근대적 주체 이미지일 수도 있다. 또
 한 정부는 가정 경제와 살림의 합리화를 계몽하면서 동시에 주부들
 에게 현모양처의 부덕(婦德)을 강조하는 식으로 ‘과학과 윤리를 결합’
 하는 근대적 주부상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이 탄핵을 불러온 이즈음에도 여전히 박정희 시대를 지지하는 시위
 대들은 그 시대의 담론을 아직도 맹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책은 또한 향후 연구와 토론의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필자는 세 가지를 주목하고 싶다. 첫째, 박정희 시대가 빚어

넌 통치성과 근대성에 대한 분석은 앞으로 한국 현대사 논의나 한국 사회 분석에서 하나의 이론적 토론 거리로 삼을 만하다. 이 책이 제시하는 시대의 다양한 모습들은 굴곡진 현대사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법론을 확대하는 작업의 가치와 잠재력을 잘 보여준다. 다만 이 책에서 표방한 ‘생활문화사’는 매력적이면서도 대중성을 겸비한 출발점이긴 하지만, 더 심층적인 이론적 지향점이나 방법론적 정교함을 제시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문헌 자료뿐 아니라 잡지, 영상, 광고 등으로 나타난 이미지와 도상, 공간 구성의 변화 등을 통해 일상생활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추적하는 다양한 방법론이 활용되었다면 더욱 흥미로웠을 것이다. 이는 앞으로 추후 연구나 토론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 중심의 기억에서 잊혀 가거나 주변화된 기억과 목소리들을 생활문화사 차원에서 재조명하는 작업은 향후 그 폭을 더 넓혀갈 필요도 있어 보인다. 가령, ‘여공’의 경험을 주로 다루었던 여성 문제는 현모양처의 탄생, 도시와 빈곤 여성 등 훨씬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개발 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화교(華僑)와 같은 우리 안의 이방인들, 해외로 떠나간 이주민과 이들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등도 생활문화사 차원에서 얼마든지 다루어봄 직한 주제들이다. 이러한 기획이 다루는 시대가 확대될수록 생활문화의 범위와 다양성도 훨씬 더 넓어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시리즈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셋째, 대중적 역사서, 특히 현대사를 다루는 대중적 단행본의 시각

에서도 '생활문화' 접근은 상당한 유용성이 있다고 본다. 현대사의 쟁점들, 특히 정치사를 다루는 대중서들이 출판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대중적 담론 안에서 한국 현대사는 억압과 저항,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식의 이분법적 진영논리로 귀결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이 책은 현대사의 흑백론에 풍부한 색채를 더하고 생활공간 속의 대중의 모습을 더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국가주의의 기억과 저항의 기억, 더 나아가 저항의 기억에서도 지워진 다양한 목소리를 재조명하는 방법론은 무엇인지, 권력의 기술과 대중의 욕망이 교차하는 다의적 과정을 성찰하고 숙고하는 새로운 시민적 교양은 어떻게 구성될지 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 책의 미덕으로 꼭 언급되어야 할 점은, 한국 현대사의 범위를 남한이라는 공간에 국한하지 않고 북한 사회, 더 나아가 동북아 지역 국가인 일본과 중국, 대만의 동시대적 변화를 함께 소개한 것이다. 이러한 구성은 이 책의 미래 지향적 시선, 통일 한국과 동북아시아라는 지역적 전망을 획득하려는 기획의도를 잘 드러낸다. 현대사 대중서 출판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사를 특수성이 아닌 보편성의 관점에서, 그리고 남북한과 지역을 연결하는 비교와 통합의 관점을 시도하는 접근은 대중들의 역사적 조망을 확대하는 데 모범이 될 만한 시도이다. ~~다~~